

한국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

안계정 (백석대학교)

I. 서론: 연구 동기, 과제, 목표

1. 연구 동기
2. 연구방법 및 방향
3. 연구과제

II.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향 모색

1. 양극화 문제 진단
2. 통계로 본 한국사회의 양극화
3. 양극화 문제의 원인과 처방

III.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양극화 문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신학적, 실천적 이념으로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1.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근본특성
2.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방향 제언

IV. 결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회의 역할

1. 성경적 원리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돕고 보호해야만 한다
2. 교회는 사회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할 연대적 의무를 계속 선포해야만 한다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을 밝힌다(2012S1A5B5A07035997).

• ABSTRACT •

A Study on the Roll of Church in Resolving the economic Polar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 By the View of Reformed Life-Theology

An, Kye-Jung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3]

Nobody could deny that the economical polarization is the most urgent issue in our society. It was the pending issue in the past 18th presidential election and is also one of the crucial government goals of Park administration. The polarization problem is important task and challenge for the korean church, because it has obviously social responsibility. At the same time participation and roll of church for resolving the polarization is also crucial to the society itself. As the polarization is the problem of total society, the voluntary and active participation of each social sectors is indispensable.

In general the polarization appears as collapse of middle class, gap of industrial continuity and increase of social vulnerable class. Especially the statistics coming from "Gini coefficient" and "income-magnification" manifests the polarization more objectively and factually.

These can be considered as fundamental causes of the polarization: policies of Neoliberalism and globalization. From policies of the Neoliberalism the flexibility of labor market is a such policy that affects directly the polarization, which comes into appearance where the dismissal of laborer is legally ensured and irregular workers are increased. As a result the middle class is decreased, the polarization is more and more accelerated. The globalization is the process in which the Neoliberalism has been spreaded world widely. The FTA that demands in core the liberalization of import and banking brings about fatal damages to some do-

mestic businesses, and they consequently would come to be taken off from the market.

First, the value of humanity indicates the most important direction in efforts resolving the polarization. The survival of the fittest and the law of the jungle is the rule of animal world; they can not be the law of human world. The man who was created from the image of God is the being that has reason and will different from the animal. He is able to open the way to co-existence and equality not to auto-destruction and co-destruction. The society is not the world of animals but the world of human beings. Second, the polarization problem has to be resolved on the basis of commonality-value. Where the Neoliberalism is spreaded, there emerge monopolistic markets, non free markets. So the truly free market is possible only there where the commonality-value is dominating; it is realized in regulations for life and co-existence. The market was for the commonality from its birth, and it will be so continually. From that reason the legal protect of byway commercial sphere becomes important. Third, the polarization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view of solidarity, not of charity. The christian ethics grasps the solidarity as contract one. It is very well-known fact that the social insurance of German as the first social insurance in the world is dependent of the christian idea and value of solidarity. And it demands, first of all, expansion and reinforcement of unemployment insurance.

Key words: economic polarization, Neoliberalism, Life-Reformed-Theology, humanity, commonality, solidarity

I. 서론: 연구 동기, 과제, 목표

1. 연구 동기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서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꼽히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비록 유력한 후보들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방법에서는 차이가 났지만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를 축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는 제18대 대선의 핵심적인 화두였으며, 현재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이다.¹⁾

양극화 문제는 한국교회에게도 중요한 과제이며 도전이다. 교회는 두 가지 근본적인 사명이 있다. 하나는 ‘종교적인 것’으로서 **예배**(kerygma)와 **교제**(koinonia)를 기본으로 한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것’으로서 **봉사**(diakonia)와 **선교**(missio)이다.²⁾ 이 둘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동시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회의 참여와 역할은 사회에게도 중요하다. 교회는 다원화된 사회의 한 영역이며, 양극화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혹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각 부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³⁾ 이렇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회의 참여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모두 중요하다.

1) 신규섭, <박근혜노믹스' 입체 분석 : 양극화 해소·경제 민주화가 '두 기둥'>, 『한경비즈니스』 통권891호(서울, 2013), 16-17.

2) Ulrich Körtner, *Evangelische Sozialethik* (Göttingen: V&R, 1999), 158.

3) 윤진호, <노동시장 양극화 추세와 정책 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금융, 노동시장, 부동산, 지역』(파주: 한울, 2006), 74.

2. 연구방법 및 방향

본 연구는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본 논문은 사회경제학적 분석을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교회의 실천을 위한 ‘신학적 연구’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당위적인 주장을 제기하는 선언적 표명에 머물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과 자연의 세계가 아니라 의미와 당위의 세계를 다룬다. 특히 기독교윤리는 인간과 사회가 마땅히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일반적인 언어로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⁴⁾ 더욱이 경제적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이고 선결되어야 할 전제는 어느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바람직한가’라는 윤리적 문제이다.

특히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논쟁을 최소화하고 실천 지향적인 관점에서 ‘신학 함’(doing theology)을 지향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Reformed life-theology)은 이 연구의 근본방향이자 방법이다.⁵⁾ 중요한 것은 본 논문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그 자체’를 연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신학적 운동이 지향하는 윤리적 관점을 기본으로 해서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다. 더욱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하나의 완결된 학문체계가 아니라 지금 학문적 공동체 안에서 논의 중에 있다. 따라서 역으로 양극화 문제라는 구체적 대상을 학문적으로 다룸으로써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안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

4) Helmut Thielicke, *Theologische Ethik. Bd. III. Ethik des Gesellschaft, des Rechtes, der Sexualität und der Kunst* (Tübingen: JCB Mohr, 1964), 21.

5) 장훈태, <2010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의 선교적 의미>, 개혁주의생명신학회, 『생명과 말씀』 제4권(서울, 2011), 51.

3. 연구과제

- 1)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일반적인 관점에서 양극화 문제를 진단한다. 양극화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지금 한국 사회에 양극화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힌다. 이를 위해 “지니계수” 혹은 “소득5분위 배율” 같은 지표는 매우 유용하다.⁶⁾ 또한 이 양극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하며, 이를 기반으로 그 해결방향을 모색한다.

- 2) 개혁주의생명신학의 관점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신학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양극화 문제의 기저에는 무엇보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이념이 있다는 사실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학계는 동의하고 있다. 이는 소득 양극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시장의 유연화**(labor market flexibility)를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에서 나왔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⁷⁾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강자는 살아 남고, 약자는 도태된다는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과 이념에 대해 신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특히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근본취지는 교회와 신학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자는 것이다. 성서가 강조하는 생명, 살림, 나눔을 오늘날의 현실에

6) 지니계수는 계층 사이에서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수학적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평하고 평등하게 소득이 분배되었음을 나타내 준다. 소득5분위배율은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7) 황종률, <노동시장 유연화와 양극화>, 『일자리정책 5호』(국회예산처, 2010), 21. 김형기, 『한국경제 제3의 길』(파주: 한울, 2006), 52. 김용조, 이강복, 『위기이후 한국경제의 이해』(서울: 새미, 2005), 169.

서 실천하자는 운동이 개혁주의생명신학인 것이다.⁸⁾

3)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를 제안한다.

양극화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성서적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는 생명력이 있는 일종의 유기체이다. 한 생명이 건강하다는 것은 몸의 각 지체가 건강하다는 것이다.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인정한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성경의 명령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성경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와 객은 오늘날 양극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과의 공동체적 연대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향 모색

본 장에서는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기술하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양극화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양극화 문제가 어떤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모색할 것이다.

8) 이관직,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목회상담>, 개혁주의생명신학회, 『생명과 말씀』 제5권 (서울: 2012), 179-215.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1) “오직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신앙운동”, 2) “사변화된 신학에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학회복운동”, 3)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생명운동”, 4)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 5)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운동”, 6)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성령운동”, 7)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세상과 이웃에게 나누며 섬기는 나눔운동”의 7가지 실천과제를 갖는다.

1. 양극화 문제 진단

1) 양극화의 개념

양극화(bi-polarization)란 사전적 의미에서 “중간 부분이 해체되면서 양극단으로 모이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윤진호는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이는 원래 정치학, 사회학 등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서, 내부적 동질성을 가지는 상호 이질적 집단(예컨대 흑인/백인) 간의 격리거리가 증대되어 양극단으로 몰리는 현상(투표행위, 사회적 형태 등) 및 그에 따른 정치, 사회적 문제의 심각화를 말하는 것이었다.⁹⁾

오늘날의 상황에서 양극화는 일반적으로 “중간층의 붕괴, 경제 부문 간 산업 연관의 단절, 사회적 배제 층의 증대”라는 양상으로 나타난다.¹⁰⁾ 양극화는 일찍이 마르크스(Karl Marx)가 자본론에서 분석했듯이 자본주의 하에서 필연적인 현상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노동에 의한 비소유와 자본에 의한 소유”라는 자본주의적 소유법칙이 작동하기에 한 극에서(부르주아)의 부의 축적은 필연적으로 한 극에서(프롤레타리아)의 빈곤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극화는 자본주의 경제에만 존재하는 자본주의적 현실인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표방하는 북한에는 양극화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 결국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라는 경제제도를 막론하고 늘 양극화 현상이 있다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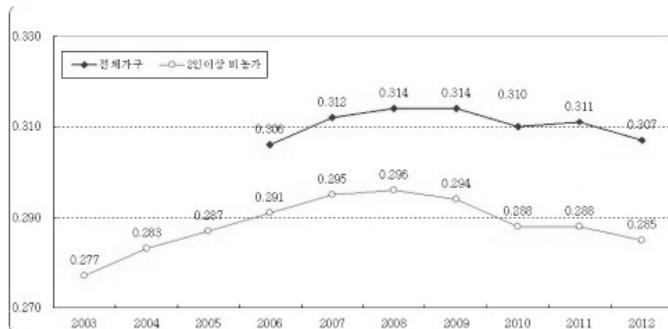
9) 윤진호, 「노동시장 양극화 추세와 정책 과제」, 76.

10) 김형기, 『한국경제 제3의 길』(파주: 한울, 2006), 46.

이처럼 한 사회가 양 극단으로 분열되는 현상은 늘 있어왔지만 본 연구가 집중하는 것은 계층 간의 소득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경제적 양극화**(economical polarization)와 이로 인해 계층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사회적 양극화**(social polarization)이다. 상위계층은 더 많은 돈을 벌며 부유하게 되고, 하위계층은 반대로 점점 가난해지는 소득의 양극화는 사실 상 양극화 현상의 본원지이다.¹¹⁾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면 사회통합은 불가능하게 되고, 불만과 불안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게 된다.

2. 통계로 본 한국사회의 양극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와 “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통계는 양극화 현상을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2006년부터 지니계수는 급격히 치솟기 시작하고 2011년에는 0.311을 기록했다. 특히 65세 이상, 곧 퇴직자의 지니계수 통계에서는 0.409를 기록,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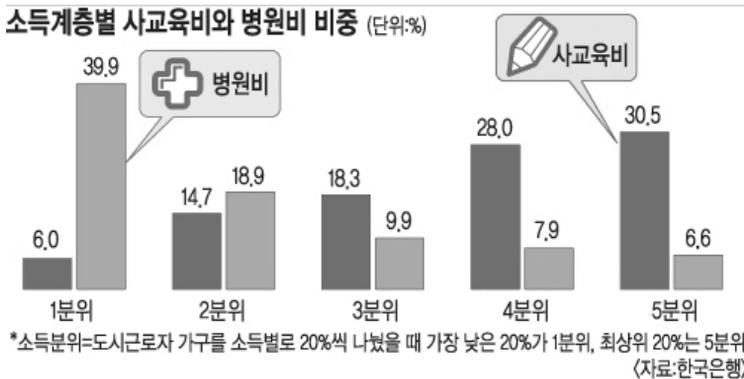
[그림 1] 지니계수

자료: <http://www.newspim.com/api/portal.jsp?newsId=20130524000262>

11) 유경준,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2), 3.

(0.524)와 칠레(0.474)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 그래프 역시 2006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1년엔 격차는 무려 7.86을 기록했다.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 같은 거시적 지표보다 양극화를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사교육비 지출 같은 미시적이고 실제적인 지표이다. 아래의 표는 201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상위 20%(5분위)와 소득 하위 20%(1분위)의 사교육비 및 병원비 지출 현황을 보여준다. 소득하위 20%는 전체 소득 중 39.9%를 병원비 지출에 사용했다. 반면 자녀의 사교육에는 6.0%만이 지출되었다. 이에 반해 소득상위 20%는 사교육비에 30.5%를, 병원비에는 6.6%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분위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분위 가구의 그것의 약 다섯 배에 이르고 있다. 자녀교육에 사실상 자신의 모든 존재성을 투여하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이러한 사교육비의 심각한 양극화는 사회통합과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임에 분명하다.¹²⁾



〔그림 2〕 소득상위20%와 소득하위20% 사교육비 및 병원비 지출

자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rcid=0004935475&cp=nv>

12) 김용조·이강복, 『위기이후 한국경제의 이해』(서울: 새미, 2005), 299.

3. 양극화 문제의 원인과 처방

기독교윤리는 사회를 유기체, 곧 생명현상의 관점에서 이해한다.¹³⁾ 따라서 양극화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거시적, 미시적 지표는 유기체로서 사회가 병들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병에는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지금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에서 기인하고 심화되었다는 견해에 대체로 학계는 동의한다.

1) 신자유주의 이념과 양극화의 심화

새로운 천년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막강한 위력을 떨치고 있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과연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완전성을 신봉하여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시장근본주의”, 사유재산권과 영리 추구 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기업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유일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 “성장지상주의”를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다.¹⁴⁾ 신자유주의는 경제영역에서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는 **규제철폐**,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부의 복지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복지서비스의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의 정책으로 구체화된다.

역사적으로 1979년 등장한 영국의 대처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기치를 선명히 내세운 최초의 정부였다. 그리고 1981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 1982년 일본 나카소네 정부가 이러한 신자유주의 노선을 철저하게 밟았

13) Thielicke, *Theologische Ethik. Bd. III.*, 68. 티리케는 인격으로서 개인을 무시하고 집단만을 강조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사회관과 공동체성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개인만을 강조하는 실존주의적 사회관 모두를 비판한다. 대신 그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Organ)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14) 김형기, 같은 책, 51.

다. “대처리즘”은 “완전고용, 복지충족, 국영화, 노동조합과의 협조를 기적으로 하는 2차 대전 이후의 영국에 대한 도전”이었다.¹⁵⁾ 대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발목 잡힌 케인즈적 복지국가를 망비난하며 “민영화, 규제완화, 행정개혁에 의한 최소한의 국가”를 부르짖었고, 이는 이후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정부의 표본이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영화, 규제완화, 작은 정부를 부르짖는 신자유주의의 ‘원조’ 대처리즘이 위기에 봉착했던 영국 경제를 결국 구하지 못한 채 좌절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좌절의 근본원인이 양극화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타산지석(他山之石) 그 이상이다. 복지지출을 최대한 줄이려는 ‘작은 정부’는 양극화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사회는 급속도로 허물어지는데 대처 정권에는 허물어지는 사회를 일으킬 재정이 없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정책들 가운데 양극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노동시장의 유연화**(Labor market flexibility)이다.¹⁶⁾ 이것은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본의 경우 이 신자유주의 정책은 일본의 전통적인 고용 구조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 일본에서 노동자는 회사를 가정과 같은 곳으로 여겼고, 회사는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으로 여기에 화답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를 가족이 아닌 일종의 교체 가능한 ‘부품’ 정도로 여기게 했다. 일본과 비슷한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IMF 사태 이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두 축으로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실행되었다. 그 결과 2000년 대 거의 모든 노동쟁의에서 ‘부당해고 철회’ 혹은 ‘해고는 죽음이다’라는 자극적인 구호가 등장하

15) 진노 나오히코, 『인간회복의 경제학』, 김욱 역 (서울: 북포스, 2002), 59.

16) 김용주, 같은 책, 164. 노동 유연성이란 “기업이 외부의 수요변화나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동의 여러 측면, 특히 고용이나 임금 측면에서 대응 가능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게 되었던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실업자 혹은 반(半)실업자를 양산하며, 비정규직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결국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하락시킨다. 그 결과 중산층은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양극화를 가속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소득 양극화의 주범인데, 이는 2012년 대선에서 여와 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는 양극화를 심화시킴으로써 건전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다.¹⁷⁾

2) 글로벌화와 중소기업의 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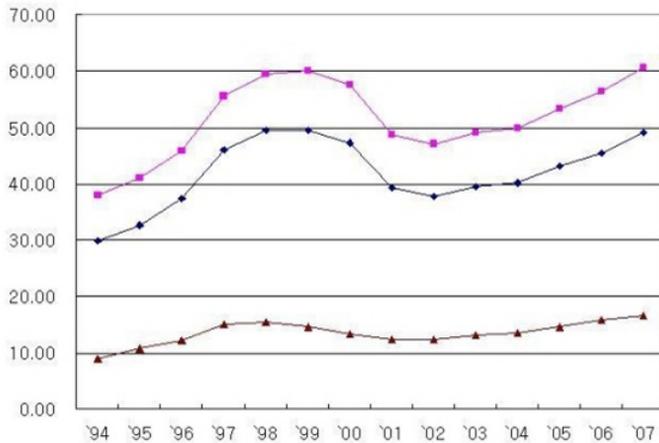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 **글로벌화(globalization)**이다. 글로벌화는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요구하는데,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은 글로벌화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어떻게 글로벌화는 양극화를 초래하는가? 글로벌화의 제도적 산물로서 FTA는 수입 자유화와 금융 자유화를 핵심으로 한다. 그 결과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산업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신자유주의적 원리에 따라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수출 부문과 내수 부문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중산층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시켜 소득 양극화를 고착시키게 된다.¹⁸⁾

아래의 표는 한국 국민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인

17) 진노, 같은 책, 38. 황중률, 〈노동시장 유연화와 양극화〉, 국회예산처, 「일자리정책 5호」(서울, 2010), 16-17. 이 연구에 의하면 첫째로 노동공급의 변화, 둘째로 기업의 노동수요의 변화, 셋째로 산업구조의 변화,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등이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18) 김형기, 같은 책, 50.

데, 가장 위의 그래프는 범8대 재벌, 중간 그래프는 범4대 재벌, 가장 밑의 그래프는 범-삼성그룹의 것이다. 범8대재벌의 경제력은 1999년 60%로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2002년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50% 이하로 내려갔다. 그 후 완만한 증가세가 보이다가 2006년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60%를 돌파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열광적으로 추진했던 정부에서 '자유로운 시장'이 아닌 '독점적인 시장'이 강화된 것이다.



[그림 3] 범8대재벌의 GDP 대비 경제 비중

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id=0002057676>

이처럼 FTA를 선봉으로 하는 글로벌화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강화시키는 객관적 조건을 조성한다. 왜냐하면 글로벌화는 철저하게 강자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벌에 대한 규제 혹은 개혁 없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지는 것은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¹⁹⁾ 한국에서 재

19) 한스 피터 마르트 외, 『세계화의 뒷』, 강수돌 역 (서울: 영림카디널, 2003). 89. 투기성

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그 자체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파괴하는 것이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반(反)시장적이다. 자유로운 시장을 부르짖는 신 자유주의가 종국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free market)이 아니라 독점적인 시장(monopolistic market)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재벌은 그 속성상 자유로운 시장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 예컨대 10개의 파이 중 누군가가 6개의 파이를 가져가는 시장이라면 그곳은 더 이상 자유로운 시장일 수 없다.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에게는 몰락이 되는 구조는 당연히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파괴적 결과를 초래한다. FTA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판로를 잃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이 되거나 시장에서 도태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말아야 할 것은 양극화는 ‘없는 사람들’에게만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준다. 영국의 경우 대처리즘이 등장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그 결과 영국의 범죄율은 급격히 치솟았고,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수감자를 지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말았다.²⁰⁾

3) 결과와 전망

결론적으로 양극화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사회를 유기체적 몸으로 봤을 때 양극화는 서서히 퍼져서 결국 생명을 앗아가는 암과 같은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은 양극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자금은 정부와 기업에 규제를 철폐하고 비용을 줄이라고 줄기차게 요구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 법인세 인하, 정리해고와 계약직 종업원 비율의 증가가 잇따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권력에 정치적 권력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20) 진노, 같은 책, 45.

〈표 1〉 출산율과 자살률

구분	참여정부		MB정부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합계출산율 (가입여성 1인당)	1.25	1.19	1.15	1.23	1.24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24.8	26.0	31.0	31.2	31.7

자료: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93439>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에 반해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아이를 잘 낳지 않고, 좌절에 봉착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지니계수가 올라 갈수록, 즉 소득이 불균형하게 분배될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자살률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로 대변되는 양극화 현상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해 교회와 신학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첫째, 이념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비판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론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철학과 사회학 등 여러 전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신학적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이는 또한 한국교회에 전면적인 반성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와 신학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해 사실상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다.²¹⁾ 그러므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그 이념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실천적으로 파멸적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21) 김순환,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성찬 신학적 고찰과 제언〉, 한국실천학회「신학과 실천」제11호 (서울, 2006), 41-69.

제시해야만 한다. 이러한 대안에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 서론에서 밝혔듯이 -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활동 같은 거시적 대책뿐 아니라 사회를 유기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각 영역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이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제안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II.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양극화 문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신학적, 실천적 이념으로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한국교회의 참여와 역할을 연구함에 있어 먼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하 생명신학)을 언급해야하는 이유는 이 신학에서 우리는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다 명료한 실천적인 방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생명신학의 근본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피고, 다음으로는 양극화 문제가 어떤 이념과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근본특성

1)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제기배경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물론 ‘전적으로’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다. 이미 성경과 신학의 역사 안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생명신학의 윤리적 함의가 어떤 ‘정답’과도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양극화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굳이 생명신학의 방향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적 도전 속에서 기독교적 생명이해의 본질적인 내용이 새롭

게 해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²²⁾ 예컨대 우리는 생명신학의 원리에 따라 사회를 생명이 있는 **유기체적 실체**(organistic reality)로 본다. 따라서 양극화는 유기체적 생명인 사회를 죽음으로 내모는 ‘질병’과 같은 것이다.²³⁾ 이러한 근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생명신학의 근본특징이 무엇인지를 3가지로 압축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2) ‘실천운동’으로서 생명신학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체계에 또 하나의 신학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인 개혁신학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자는 실천운동이다.²⁴⁾ 그러므로 생명신학의 근본특성은 전적으로 새로운 어떤 신학적 조류를 형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개인과 사회와 문화의 전 영역으로 확장시키자는 신학적, 실천적 운동이다. 즉 생명신학에서 ‘신학’은 단순히 이론적 사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 포괄하는 지시어이다.²⁵⁾

이러한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는 무생물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일종의 유기체와 같은 것이다.²⁶⁾ 그래서 유기체와 사회 사이에는

22) 이와 더불어 본 연구자가 속한 학문적 공동체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지향하고 있다는 연구자의 주관적 조건도 고려되어야 한다.

23) 물론 생명신학의 사회관은 사회생물학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사회생물학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 그 결과 사회는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곳이다. 그러나 생명신학의 원리는 이러한 관점을 반대한다. 비교: 최재천, 『사회생물학. 인간의 본성을 말한다』(서울: 산지니, 2008), 365.

24) 장중현, 〈발간사〉, 개혁주의생명신학회 「생명과 말씀」 제1권(서울, 2010), 8. 예컨대 개신교의 근본교리인 ‘칭의’는 사도바울이 완전히 새롭게 ‘발명한’ 어떤 것이 아니다. 칭의 사상은 이미 구약의 역사 속에 면면히 내려오고 있었다. 바울은 그의 시대적 도전 속에서 칭의를 새롭게 해명한 것이다. 루터(Martin Luther) 역시 그의 시대적 도전 속에서 성경적 칭의개념을 새롭게 해명했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 ‘생명’과 ‘신학’의 유기성이 있는 것이다.

25) 박찬호, 〈개혁주의생명신학과 신학 교육〉, 개혁주의생명신학회 「생명과 말씀」 제1권(서울, 2010), 39-86.

강력한 유비가 존재한다. 여러 지체가 몸을 구성하듯이 각 영역이 사회라는 전체를 구성한다.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듯이, 사회의 한 계층이 상한다면 결국 사회 전체가 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양극화는 사회의 공동체적 문제이다. 사실의 문제는 오직 사실로만 해결될 수 없다. 의미와 당위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3) ‘살림운동’으로서 생명신학

그렇다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무엇을 실천하기 위한 운동인가? 그것은 성경과 신학을 관통하는 주제로서 ‘생명의 살림’을 실천하기 위한 운동이다.²⁷⁾ 생명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 특히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든 교훈, 모든 이적들, 그의 죽음과 부활은 생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의 근본적인 요구라고 단적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냐?”(마가3:4)는 예수의 날카로운 질문은 신학과 교회의 실천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성경에서 인간의 생명은 통합적(holistic)이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생명은 귀하고, 육체의 생명은 추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²⁸⁾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웃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빵이다. 일단 생물학적 생명이 있어야 영적인 생명도 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제시하는 생명은 인간 존재의 다층성에 상응한다. 이처럼 생명신학의 운

26)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주의 강연』, 김기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8), 215. 이러한 신학적 사회유기체론은 스펜서(Herbert Spencer)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진화론”과는 다른 것이다.

27) 최갑중,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당위성과 방향’>, 개혁주의생명신학회「생명과 말씀」제 1권(서울, 2010), 87-118.

28) 장종현, 같은 곳.

리적 의미는 보다 명료하다.

4) ‘나눔운동’으로서 생명신학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중국적으로 나눔운동을 지향한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세상과 이웃에게 나누며 섬기는” 운동이다. 물론 이것은 종말론적 지향(eschatological aim)이다.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치열한 현실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줄 수는 없다.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의 중국이기에 세상은 파편적으로(fragmentarily) 혹은 잠정적으로(provisionally) 그러한 목표에 다가서야 한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요구이다.²⁹⁾

이러한 나눔의 가치와 요구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양극화 문제는 순수하게 정치사회적으로 혹은 경제학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공동체적 문제이기에 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성장이 둔화되는 지금의 구조에서 나눔은 단순히 도덕적 요청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다.³⁰⁾

2.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방향 제언

그렇다면 생명신학의 이러한 윤리적 방향성은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어떤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가? 우리는 인간성과 공동체성과 연대성이라는 세 가지 근본적인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 가치들이 오로지 생명신학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론과 실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자함이다.

29) 최갑중, 같은 논문, 98.

30) 김선빈 외, 『상생의 경제학』(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9), 33.

1) 인간성: 사회는 인간이 모여 사는 곳

성서와 기독교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는 생명이 있는 일종의 **유기체(organic)**이다. 그러나 이는 콩트(August Conte)에서 시작하는 사회유기체설(theory of social organism)과 맥을 같이 하지는 않는다. 사회유기체설은 물론 사회를 단지 개인의 집합 정도로 여기는 원자론적 사회관을 비판하고 사회의 유기체적 성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³¹⁾ 그러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축으로 하는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사회 다윈주의(social darwinism)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은 동물의 법칙이지 **인간의 법칙**일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회 다윈주의와 여기에 발을 딛고 서있는 신자유주의에서 가장 큰 가치는 경쟁과 생존이다. 물론 경쟁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비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간성의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동물적인 것이 되고 만다.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면 막대한 보상이 따르고, 탈락하면 도태되는 구조만 존재하게 된다면 사회는 막대한 보상을 쟁기는 승리자와 도태되어야만 하는 패배자의 두 부류 밖에 없다. 보상을 쟁긴 승리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승리를 확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중간은 사라지고 패배자만 양산된다. 여기서 도덕과 정의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약육강식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중력법칙에 대해 도덕을 논할 수 없는 것처럼 사회적 적자생존에 대해서도 도덕을 논할 수 없다.³²⁾ 이렇게 사회 다윈주의의 관점으로만 양극화를 본다면 양극화는 사회적 약육강식의 필연적 결과이다. 강자는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아 보상을 쟁기는 것이고, 약자는 약하기 때문에 탈락하여 도태되는 것이다. 사회다윈주의의 또 다

31) 이재규, 『지식사회』(서울: 환경제신문사, 2009), 78.

32)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역 (서울: 김영사, 2011), 48.

른 기초는 철저한 개인주의이다. 개인의 탈락과 도태는 개인의 책임이지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 다윈주의 세계관의 필연적 결과는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이라는 재앙이다. 출산은 젊은 세대의 몫이다. 그런데 “88만원 세대”라고 불리는 이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것은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인구의 감소가 확산되면 결국 사회는 붕괴되고 만다. 그것은 문명의 종말이다. 신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world forces of this darkness)이며 이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spiritual forces of wickedness)이 있는 것이다(에베소서6:12). 파국과 종말 앞에서 인류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인간성(humanity)**의 가치는 파멸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준다.³³⁾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은 동물의 법칙이지 인간사회의 법칙이 아니다.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법칙조차도 자연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자연은 의지가 없기에 오로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통해서만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과 의지를 지닌 존재이다. 토의와 합의를 통해서 자멸과 공멸의 길이 아닌 상생과 평등의 길을 열수 있다.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는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세계이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과 극복의 대상이다.³⁴⁾

2) 공동체성: 시장은 사회 공동체를 위한 것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몰락은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임을 우리는 앞에서 지적하였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33) 시오노야 유이치, 『경제와 윤리』, 박영일 역 (서울: 필맥, 2006), 51.

34) 페터 울리히, 『신자유주의시대 경제윤리』, 이혁배 역 (서울: 바이북스, 2010), 15.

및 집중을 넘어서는 독점은 사회 다윈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들에 따르면 시장은 정글이다. 정글에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결국 오로지 강한 자만이 살아남듯이 시장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규제철폐와 민영화는 자유로운 시장이 아니라 독점적인 시장을 만들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올리히는 다음과 같이 시장의 본질을 정확히 지적한다. “시장에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객관적인 강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주체들이 소득과 이윤을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생겨나는 그들 사이의 상호적인 강제만이 존재할 뿐이다.”³⁵⁾ 다시 말해 시장은 중력법칙 같은 절대적 강제성이 지배하는 단순한 물리적 실체가 아니다. 시장의 본질은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이 맺는 다양한 관계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가정은 부모-자식의 혈연적 관계가 존재하는 곳인 것처럼, 시장은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는 곳이다.

경제적 관계는 정치적 관계와 매우 다르다. 건전한 의회민주주의 아래서 정치적 독재는 불가능하다. 선거라는 경쟁을 통해 다수당은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독재정당은 나오지 않는다. 왜 시민은 선거에서 압도적인 독재정당을 만들어주지 않는지는 매우 불가사의하다. 그러나 경제영역에서는 다르다. 시장에서는 구조적으로 독과점이 가능하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는 것은 합법이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독점하는 거대재벌이 나타난다. 왜 시장에서 압도적인 독점기업이 허용되는지는 매우 불가사의하다. 모든 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로운 시장을 보장하라는 거대기업의 요구는 사실상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요구하는 것이다. 역사와 현실이 보여주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진정한 적은 ‘좌파’가 아니라 거대기업이라는 사실이다. 과거 시민이 정치적 독재에 저항했듯이 지금의 시민은 경제적 독재에 저항해야만 한다.³⁶⁾

35) 올리히, 위의 책, 38.

자유로운 시장은 오로지 공동체성의 가치가 지배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그것은 생명을 위한, 상생을 위한 규제에서 실현된다. 규제는 규범(norm)을 전제하므로 도덕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규제는 시장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성을 억누르는 족쇄가 아니라 자멸과 공멸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제동장치이다. 사회는 홀로 살수 없는 의존적 존재인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형성되는 ‘관계의 웹’(web of relationship)이다. 인간의 의존성은 사회적 공동체성으로 구현된다. 시장은 그 탄생부터 사회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으며, 계속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³⁷⁾

그러므로 이른바 ‘골목상권보호법’의 제정과 강력한 운용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법의 근본취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상권침해를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소위 ‘골목상권’으로 통칭되는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로운 시장을 막는 반(反)시장적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독과점을 막음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시장을 유지하려는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강제력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이다. 사회는 한 곳이 아프면 결국 몸 전체가 아프다는 유기체적 공동체라는 성숙한 합의가 법적 강제력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성숙이 매우 중요하다.

3) 연대성: 사회적 상생의 기초

양극화는 경쟁을 활동원리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필연적 부산물일 수 있다. 왜냐하면 경쟁은 반드시 탈락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경쟁 그 자체가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탈락자와

36) 울리히, 위의 책, 140.

37) 진노, 같은 책, 36. 진노는 이렇게 단정한다. “그러나 결정권은 시장이 아닌 인간에게 있다. 인간이 자신의 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요소시장을 창조했다.”

탈락 위기에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는 도덕적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회와 시장의 실체는 결국 인간이기 때문이다.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는 사회복지 시스템이다. 복지제도는 시장제도와 함께 시장경제 하에서 상생의 메커니즘을 실현하는 제도적 기초로서 보통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기본 축으로 한다.³⁸⁾ 그렇다면 복지는 시장에서 승리한 자가 탈락한 자에게 베푸는 도덕적 시혜인가? 여러 이유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당연히 시혜적이다. 그러나 시혜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낙인효과를 가져와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양극화 문제는 시혜의 관점이 아니라 **연대성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기독교윤리는 연대성을 계약적 연대성으로 파악한다. 구약성서에서 아훼와 이스라엘이 체결한 계약은 하나의 모델이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계약적 연대성이 기초한다. 그래서 고아와 객과 과부로 통칭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단순한 시혜(charity)가 아니라 계약적 **의무(duty)**이다.³⁹⁾ 물론 이러한 신학적 연대성의 이념을 곧바로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인정받고 있는 독일의 **사회보험(Sozialversicherung)**이 기독교적 연대성 이념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다.⁴⁰⁾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는 많은 부분 독일의 것을 모델로 하고 있으므로 한국사회는 일정부분 기독교적 이념에 빛지고 있는 것이다.

38) 김선빈 외, 『상생의 경제학』, 93.

39) 안계정, 『기독교와 정의』(과주: 한국학술정보, 2013), 54. 공동체성과 연대성은 비슷한 개념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공동체성은 '이념'으로, 연대성은 '실천적 방안'으로 보아야 한다.

40) Körtner, *Evangelische Sozialethik*, 46.

연대성의 가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고용보험의 확대와 강화**를 요구한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은 임금을 받자는 것이 아니다. 고용보험은 연대성에 기초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정규직, 비정규직 구별 없이 모두 고용안정을 보장받자는 것이다. 특히 2013년 현재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3%로 집계되고 있다.⁴¹⁾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양극화의 주범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부터 연대성의 가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목표는 모든 노동자가 정규직으로서 사회보험이라는 의무와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죄의 구조에서 이것은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포기해서도 안 될 것이다. 현실에서 최선이 불가능하다면 먼저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성의 가치는 먼저 고용보험의 확대와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IV. 결 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회의 역할

이상에서 우리는 양극화의 원인을 진단했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양극화 해소의 방향과 그 중점과제를 제안하였다.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아니라 신학적 연구, 곧 기독교윤리적 연구이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목적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본 연구를 매듭짓고자 한다.

41) <http://news1.kr/articles/1232967>

1. 성경적 원리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돕고 보호해야만 한다

성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는 자”(신명기10:18)이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할 의무는 공동체적 연대성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노예였기 때문이다.⁴²⁾ 신약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사실상 모두 가난한 자들이었다. 예수의 설교에서 “프토코이”(ptoxhoi), 곧 가난한 자들은 우선성을 갖는다.

한국교회는 성서의 이러한 관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성경적 원리에 따라 전체 십일조의 1/3을 가난한 자와의 연대에 사용해야만 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십일조를 내야하는 종교적 의무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 십일조를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에 대한 **분배적 의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해왔다. 성서는 거두어들인 전체 십일조의 1/3은 고아와 객과 과부, 곧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분명하게 말한다(신명기26:12).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이러한 성서적 명령에 순종한다면 자연스럽게 복지지출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덜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보다 효율적으로 양극화 문제에 대처하게 될 것이다.

2. 교회는 사회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연대적 의무를 계속 선포해야만 한다

교회의 본질은 영적인 공동체이다. 교회는 정치단체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니다. 그러나 사회 가운데 존재하기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 예수는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렀다(calling from the world).

42) 안계정, 『기독교와 정의』, 56.

이것이 소명(calling)이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였다(sending to the world). 이것이 사명(sending)이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렇게 소명과 사명의 공동체이다.⁴³⁾

교회는 예언자적 사명이 있다. 구약성서시대에 예언자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통칭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선지자 아모스가 대표적이다. 그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에 대한 여러 억압과 폭력을 고발하며, 이런 억압과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정의를 쓴 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모스 5:7)이라고 통렬하게 고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자들의 현실비판 의식은 어떤 계급투쟁을 선동하려는 것이 아니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보호하라는 율법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외침의 핵심이었다.

한국교회는 이 예언자적 선포를 자신의 사명으로 깊이 자각해야만 한다. 몸의 한 곳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듯이 사회의 한 부분이 아프면 사회 전체가 아프다는 공동체성의 원리와 가치를 선포해야한다. 사회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 상생과 존중의 가치가 있는 인간의 세계임을 선포해야만 한다. 비록 그것이 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것이 자신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교회의 예언자적 선포는 비록 그것이 작은 몸짓이라 해도 결국에는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있어 중차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43) Thielicke, *Der evangelische Glaube Bd. III. Theologie des Geistes* (Tübingen: JCB Mohr, 1978), 392.

참고문헌

1. 한국어 단행본

- 강신욱 외.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 총괄보고서 : 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 방안(3차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 서울 :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9.
- 김문조. 『한국사회의 양극화 : 97년 외환위기와 사회불평등』. 파주 : 집문당, 2008.
- 김선빈 외. 『상생의 경제학』.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9, 33.
- 김용조 · 이강복. 『위기이후 한국경제의 이해』. 서울 : 새미, 2005.
- 김형기. 『한국경제 제3의 길』. 파주 : 한울, 2006.
- 김광기. 『뒤르켐 & 베버. 사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서울 : 김영사, 2007.
- 안계정. 『기독교와 정의』.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3.
- 유경준.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12.
- 윤진호. 『노동시장 양극화 추세와 정책 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 금융, 노동시장, 부동산, 지역』. 파주 : 한울, 2006.
- 이승길 · 조준모.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서울 : 산업연구원, 2006.
- 이재규. 『지식사회』. 서울 : 한경제신문사, 2009.
- 정한울, 정원칠. 『최우선 국정과제 : 양극화 해소 37.4 , 경제성장 20.8』.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2010.
- 최재천. 『사회생물학.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 서울 : 산지니, 2008.

2. 번역서

- Bonhoeffer, D. 에버하르트 베트게 엮음. 고범서 역. 『옥중서신』.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8.
- Naohiko, J., 김욱 역. 『인간회복의 경제학』. 서울 : 북포스, 2002.
- Rawls, J., 황경식 역. 『사회정의론』. 서울 : 서광사, 1985.
- Sandel, M.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 김영사, 2011.
- Stegemann, E., 손성현 · 김관임 역.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서울 : 동연,

2009.

Ulrich, P., 이혁배 역. 『신자유주의시대 경제윤리』. 서울: 바이북스, 2010.

Walterstorff, N., 홍병룡 역.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 서울: IVP, 2007. ₩

Yuichi, S., 박영일 역. 『경제와 윤리』. 서울: 필맥, 2006.

3. 외국어 단행본

Kant, I.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surkamp taschenbuch wissenschaft 56,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4.

Körtner, U. *Evangelische Sozialethik*. Göttingen: V&R, 1999.

Moltmann, J. *Politische Theologie Politische Ethik*. Grünewald, 1984.

Nozick, R.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1974.

Thielicke, H. *Der evangelische Glaube. Bd. I. Grundzüge der Dogmatik. Prolegomena: Die Beziehung der Theologie zu den Denkformen der Neuzeit*. Tübingen: JCB Mohr, 1968.

Thielicke, H. *Der evangelische Glaube. Bd. II. Gotteslehre und Christologie*. Tübingen: JCB Mohr, 1973.

Thielicke, H. *Der evangelische Glaube Bd. III. Theologie des Geistes*. Tübingen: JCB Mohr, 1978.

Thielicke, H. *Theologische Ethik Bd. II/2. Ethik des Politischen*. Tübingen: JCB Mohr, 1958.

Thielicke, H. *Theologische Ethik. Bd. III. Ethik des Gesellschaft, des Rechtes, der Sexualität und der Kunst*. Tübingen: JCB Mohr, 1964.

4. 논문 및 인터넷 자료

김병권.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전망 : 신자유주의 · 시장지상주의가 핵심기조 : 기업 · 성장 우선, 양극화 해소 가능할까?」. 『민족21』. 통권83호, 2008년 2월, 94-97.

김순환.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성찬 신학적 고찰과 제언」. 『신학과 실천』 제11호 (2006년 가을). 한국실천학회, 41-69.

김정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고찰 : 대기업 S사와 중소기업 C사의 사례를 통하여」. 인천: 인천대 경영대학원(2011.8), 35-67.

- 신규섭, 「'근혜노믹스' 입체 분석: 양극화 해소·경제 민주화가 '두 기둥」, 『한경비즈니스』 통권891호(2013), 16-17.
- 신호균, 「한국교회의 양극화 현실과 실천적인 해소방안에 관한 탐색적 접근」, 『로고스경영연구』 제5권 제1호 통권10호(2007. 5), 한국로고스경영학회, 1-19.
- 윤철원, 「양극화 해소와 성서신학의 대안 모색」, 『基督教社會福祉』 제15호(2006년), 부천: 서울神學大學校 教育福祉研究所 基督教社會福祉研究室, 2007, 10-19.
- 이대성, 「교회내에서의 양극화 해소 극복 방안」, 석사학위논문, 대전: 침례신학대 신학대학원, 2007.
- 이관직,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목회상담」, 『생명과 말씀』 제5권, 개혁주의생명신학회 편(2012): 179-215.
- 이신열, 「공정한 한국사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칼빈의 견해를 중심으로」, 『개혁주의이론과 실천』 제2권(2011), 65-95.
- 정상훈, 「막스 베버의 개신교 윤리를 통한 한국교회 양극화 문제 해소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2008.
- 정종성, 「하나님 나라의 양극화 해소」, 『기독신학저널』 제15권 (2008년 가을), 서울: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129-155.
- 장훈태, 「'2010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의 선교적 의미」, 『생명과 말씀 제4권』, 서울: 개혁주의생명신학회, 2011: 51- 78.
- 황종률, 「노동시장 유연화와 양극화」, 『일자리정책 5호』, 국회예산처, 2010, 21-50.
- 양극화 해소 및 민생안정 종합계획 수립(안) /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회.
- 내용구분 보도자료, 서울: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2007.
- 양극화문제 해소방안 연구 요약보고서, 200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
- <http://www.newspim.com/api/portal.jsp?newsId=20130524000262>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935475&cp=nv>

논문투고일: 2014. 06. 30.

심사개시일: 2014. 07. 11.

게재확정일: 2014. 08. 09.

• 국 문 초 록 •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서 ‘사회 양극화’ 문제가 꼽히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양극화문제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으며, 현재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양극화 문제는 한국교회에게도 중요한 과제이며 도전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회의 참여와 역할은 사회에게도 중요하다. 양극화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에 따라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 각 부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양극화는 일반적으로 “중산층의 붕괴, 경제 부문 간 산업 연관의 단절, 사회적 배제층의 증대”라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통계는 양극화 현상을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정책과 글로벌화를 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들 가운데 양극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이다. 이것은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결국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하락시킨다. 그 결과 중산층은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양극화를 가속시킬 수밖에 없다. 글로벌화는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다. 글로벌화의 제도적 산물로서 FTA는 수입 자유화와 금융 자유화를 핵심으로 하는데, 그 결과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산업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수출 부문과 내수 부문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중산층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시켜 소득 양극화를 고착시키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핵심적인 가치를 제시한다.

첫째, 인간성의 가치는 파멸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은 동물의 법칙이지 인간사회의 법칙이 아니다.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이성과 의지를 지닌 존재이다. 토의와 합의를 통해서 자멸과 공멸의 길이 아닌 상생과 평등의 길을 열수 있다.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는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세계이다.

둘째, 양극화 문제는 공동체성의 가치 위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곳에는 자유로운 시장이 아닌 독점적인 시장만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로운 시장은 오로지 공동체성의 가치가 지배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그것은 생명을 위한, 상생을 위한 규제에서 실현된다. 따라서 규제는 시장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성을 억누르는 족쇄가 아니라 자멸과 공멸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제도장치이다. 시장은 그 탄생부터 사회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으며, 계속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골목상권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셋째, 양극화 문제는 시혜의 관점이 아니라 연대성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기독교윤리는 연대성을 계약적 연대성으로 파악한다. 세계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인정받고 있는 독일의 사회보험이 기독교적 연대성 이념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연대성의 가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고용보험의 확대와 강화를 요구한다.

주제어: 양극화, 신자유주의, 생명신학, 인간성, 공동체성, 연대성
